

사회 갈등 치유 · 국민통합 앞장

국민통합위 전북협의회 출범

도·통합위·도의회, 협약 정책·사업 추진 등 협력

중앙-지역 가교역할 수행

우리 사회의 내재된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해 설치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전북지역협의회가 출범했다

전북도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라북도-국민통합위원회-전라북도의회 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통합위원회 전북지역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국민통합위원 7명과 전북지역협의회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체결 지역협의회 위원 위촉식 및 지역협의회 1차 회의가 진행됐다.

전북도와 국민통합위, 전북도의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문화 확산과 교육·조사·연구, △중앙과 지역 간·지역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간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 소통 및 대통합의 기치 아래 구성된 전북지역협의회의 위원 2명은 김한길 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앞으로 지역 현장 중심의 국민통합 실현을 위해 중앙-지역 간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출범식에 이어, 전북지역협의회는 전라북도 핵심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하 대광법)' 및 '전북형 민관상생 제조혁신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도 - 국민통합위원회 - 전북도의회 업무협약 및 지역협의회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출범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00프로젝트'를 주제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전북은 국가적 지방 불균형과 정부의 광역시 위주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설 지원사업에서도 소외되는데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개진해 왔다

지난달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법안 통과가 보류되었으나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에 다시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민통합위원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위원들은 공감했다.

또한, 전북도는 대기업 유치 성과와 함께 '전북형 민관상생 제조혁신 300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 발전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소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라북도는 수도

권, 영호남, 호남내 초광역 제의라는 4중 차별에 직면해 있고, 특히 광역시가 없어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소외됐다"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사대를 만들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피력했다.

국주영은 도의장은 "국민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세대, 지역, 젠더, 이념간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통합은 요원한 일이 되므로, 누구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해 주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통합위원회가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전북은 수소 산업, 농생명 산업 등을 선도하고 있으며, 새만금은 미래 신산업과 관광·레저

의 중심지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전북은 우리나라 발전을 견인할 잠재력이 가득한 지역이다"며 "전라북도가 더 발전해 우리나라의 번영과 미래의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진정한 국민통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전북지역협의회 위원들도 "새로운 전북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기회이자 전환점이 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설치됐다. 현재까지 충북, 전남, 부산, 인천, 충남, 대구, 세종에서 지역협의회를 출범했으며, 전북도는 8번째로 출범식을 개최하게 됐다. /김재훈 기자

이낙연 전 총리, 대외전략책 발간

“한국, 전례없는 위기 직면”

“새로운 생존전략에 대한 고민·구상 책에 담았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는 26일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라는 대외전략 관련 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미국에서 유학 중인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새로운 생존전략이 필요해졌다"며 "그에 대한 저의 고민과 구상을 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이 단독 주도한 탈냉전 시대는 대한민국에 선물 같은 기간이었다"며 "대한민국은 냉전의 굴레를 벗고 불안정한 평화로도 누리며, 외교자령의 확대와 경제적 번영을 향해 질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가 없는 선물은 없다"며 "그 기간에 북한은 국제적 고립에 내몰리며 핵무장으로 폭주했다"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제 탈냉전이 끝나고 미중 신냉전이 눈앞의 현실

로 다가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1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며, 도발을 상시화했고 지난해만도 ICBM 등 탄도미사일 60회를 포함해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쏘았다"고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기록적인 무역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설익고 즉흥적인 외교는 아슬아슬한 불안을 야기한다"며 "대한민국은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어렵게 달성한 평화와 번영이 동시에 위협받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책은 지난해 6월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에 유학한 이후 공부한 결과"라며 "신문사 특파원과 국제부장으로,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들도 녹여 넣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대외전략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분야이지만 이제는 외교도 학자나 외교관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됐다"며 "이 책이 국가생존을 걱정하시는 일반 국민과 대한민국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뉴스

전북도 · 14개 시군 청렴정책 공유

도, 청렴 감사관 간담회

전북도는 26일 도청에서 도와 14개 시·군이 함께 청렴정책을 공유하는 도·시·군 청렴 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을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감사관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도와 시·군별 청렴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청렴도 향상 방안 및 도·시·군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지자체간 청렴정책을 서로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먼저 2023년 전라북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2023년 전라북도 반부패·청렴정책은 '가치있는 청렴,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하는 청렴전북'을 비전으로 세우고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성과 창출을 위해 △기관장 주도의 청렴정책 시행 등 청렴생태계 강화, △감찰 근절 대책 추진 등 부패 취약 분야 집중개혁,

△도민감사관과 함께하는 현장점검 등 소통·공감 청렴정책 등 3대 추진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어서 시·군별 2023년 청렴정책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부안군은 주요 청렴시책으로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청백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지난 4월 3일 갖는 등 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고위직 주도의 청렴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도·시·군 감사관들은 서로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보다 더 새로운 청렴정책과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그 밖에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전북도 시·군 감사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 기금운용 및 관리 개선방안 △화계면도 감사사례, △고층 민원현장상담실 운영, △사전컨설팅 감사, △원가심사 숙지사항 등을 안내했다. /김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도, 인권역사현장 선정에 “도민 의견 반영”

전북도는 인권역사현장 선정을 위해 도 누리집을 통해 26일부터 5월 5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융역수행기관)은 인권역사현장 발굴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달 3월 2일 착수했고, 인권역사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발굴 및 인권지도 제작을 위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다.

이번 도민 의견 수렴 내용은 소개화기 및 일제강점기 종교자유인권 외세 저항 동화농민혁명 등 △전쟁과 집단희생 △민중운동(민주노조, 농민운동 포함), △소수자 인권(여성, 이종, 장애인 이주외국인, 노인) △기타 등

의 5개 항목 내용으로 구성됐다.

인권역사현장 선정 의견 수렴은 전북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한 도민 50명에게는 추첨을 거쳐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인권역사현장 50곳 발굴 프로젝트를 시범운영 할 계획이다.

정호윤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의견 수렴을 통해 도민이 생각하는 지역의 인권역사현장을 파악하는 동시에 인권의 역사적, 교육적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성과 확산 꾀한다

‘전국 농촌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박람회’ 28일 도청서

전북농촌신활력플러스협의회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전국 농촌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박람회'를 전북도청 공연장 및 야외마당에서 28일 개최한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2018년 10개 시·군을 시작으로 22년까지 전국 100개소(전북 12개)에 총사업비 7,000억원(전북 840억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는 창의적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할 인적자원 양성과 조직화로 농촌의 자립적 성장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박람회는 본 사업의 핵심주체인 액션그룹의 창의적 사업실현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속적인 양성방안 마련을 위해 52개 시·군 추진단, 액션그룹, 행정,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 최초의 행사이다.

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전국 액션그룹 상품 전시·홍보, △전국 추진단 성과 및 선진사례 상담, △지역의 활력과 활성화를 위한 토크콘서트(1미당 액션그룹과 함께, 2미당 추진단과 함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